

#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와 도약을 위한 과제\*

배 경 내\*\*

“유아의 행위-가족,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에 대한 존중은 종종 간과되거나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된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 내에서 무기력하며 종종 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다.”<sup>1)</sup>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의 견해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를 통해 국가가 아동과 상호교류하고 아동을 위한 국가의 행위가 아동 권리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파악돼야 한다.”<sup>2)</sup>

“교육은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며, 제12조 1항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참여하도록 해주어야만 한다.”<sup>3)</sup>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복잡한 심경에 빠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유아기가 아예 청소년기 전반으로, 아니 길게는 20대 중후반까지 확장된 것은 아닌

---

\* 투고일자 : 2011. 11. 18      심사일자 : 2011. 12. 8      게재확정일자 : 2011. 12. 23

\*\*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중에서.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중에서.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중에서.

가? 십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돌봄에 대한 요청이 매우 각별한 우리 사회가 과연 그들의 자력화(empowerment)는 지원하고 있는가?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마땅히 앉아야 할 의자를 치워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는 그들을 다시 가족과 학교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가? 그럼에도 통제의 그물망을 뚫고 꼬물꼬물 기어 나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008년 일제고사가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입시경쟁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을 때, 나온 구호 가운데 하나는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였다. 일제고사가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위협한다는 절박한 의미를 담은 구호였지만, 다른 한편 일제고사가 빼앗는 것을 ‘밥과 잠’이라는 동물적 생존 상태로밖에 표상하지 못한 것은 성인들의 지적 한계, 청소년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한계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일제고사가 진정 빼앗는 것은 밥 먹을 시간, 잠 잘 시간이 아니라 ‘비어 있는 시간’, 아무의 지시와 통제도 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야 비로소 청소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은 아닌가? 이 글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프레임을 깨고, ‘인간의 권리’를, ‘시민권’을 되찾고자 고군분투해온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주도로 추진돼온 청소년 참여 정책이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돼온 청소년 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로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 I. 청소년 인권 신장과 참여의 변증법

쉽게 잊히지만 청소년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시대의 큰 흐름에 줄곧 동참해 왔다.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항쟁, 89년 전교조 창립을 전후로 폭발적으로 전개된 교육민주화운동,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소파개정운동, 가깝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로는 청소년들이 자기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의제들에 집약된 목소리를 내고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청소년헌장 개정, 청소년자치위원회 설치 등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의 추진, 온라인 소통방식의 출현도 청소년 인권운동의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성장과 자율적·독립적 삶에 대한 욕구의 증가라는 사회문화의 변화야말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자발적 조직화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음에 분명하다.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는 그들의 인권 신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 초대를 받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당사자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 없이 인권이 그저 주어지는 일이란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청소년의 의견 존중과 참여를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이 독자적인 진영으로 태동한 것은 불과 15년 전이지만, 서구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 사회문화적 격동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청소년들은 ‘우리는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님’을 선언하면서 청소년 인권 보장과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를 강력히 주창했다. 당시 청소년 인권운동의 새로움은, ‘자비로운 성인’, ‘개념 있는 성인’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청소년들 자신에 의한 운동이 본격화되었다는 데 있다. 당시 청소년들이 사회를 향해 던진 요구 사항을 보면, 누구에 의해 대리되지 않는 자기 결정권과 자율적 삶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어린이와 청소년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공장법이나 아동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착취로부터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권리의 주체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법률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 아니면 국가, 즉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 (2)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의무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없다.
- (3)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학교운영에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학교규율의 제정과 커리큘럼의 결정에까지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4) 결사의 권리; 학생에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고 동맹휴업과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5)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두려움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진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장이나 교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하는 ‘부모 대위설’(친권이양론)<sup>4)</sup>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 (6) 용모를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 부모에게 교복 착용의 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은 ‘온

화한 형식의 갈취'이며, 학생 자신이 서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7) 표현의 자유; 교지, 동아리, 학회 활동 등에 대한 자의적인 검열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기숙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편지에 대한 검열도 폐지되어야 한다.

(8) 체벌의 폐지; 체벌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일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9) 신앙 활동의 자유; 어린이와 청소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종교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나아가 종교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10)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어린이와 청소년은 모든 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성(性),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 온 역할, 술이나 담배 등에 관한 지식도 포함된다.<sup>5)</sup>

(11) 그 외에도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적 자유를 인권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외에도 실수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make his own mistakes), 선거권, 후견인의 선택권,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기되었다.<sup>6)</sup>

이와 같은 주장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존 관념에 파열을 내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강조점이 '보호'에서 '자율성'으로, '보살핌'에서 '자기결정'으로, '복지'에서 '정의'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sup>7)</sup> 학교 안에서도 학생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

4)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부모가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학생들의 재학(在學)과 동시에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제권을 위임받음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에 어긋나는 학생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부모대위설은 부모의 권리 대 학교의 권리라는 구도 속에서만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어린이·청소년 자신의 인권, 그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과 상충된다.

5) 당시 영국에서 제기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주제들과 이에 대한 각 그룹이나 논자들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ringer, C. A. *Children's rights: A Philosophical Stud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Boston and Henley, 1981, pp.11-15을 참조.

6) John Holt는 『아동기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Childhood)(E.P.Dutton, 1974)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여행권, 후견인 선택권, 안정된 수입을 받을 권리,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권리, 술·담배 복용과 운전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Freeman, Michael D. A. "Introduction: Rights, Ideology and Children", in Freeman, Michael D. A. et al.(eds.)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p.3.

레들이 이어졌고, 부모의 친권 행사에서도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민법 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친(國親)사상에 기반하여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국가형벌권 행사에서도 절차적 엄격성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선거 연령도 인하됐다. 유엔에서도 1970년대 이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포럼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sup>8)</sup> 청소년들이 참여 속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며,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주체적 운동이 일구어낸 변화였고, 그 흐름과 요구가 집약된 결과가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1989)이다.

청소년의 참여는 또한 청소년에게 자기 학습과 자력화(empowerment)에도 크게 기여한다. 사회로부터 배제된 결과 ‘무지와 무권력의 악순환 구조’ 속에 갇혀 있어야 했던 청소년들이 배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기 삶의 운영과 지식, 권력의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권리행사능력을 기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미성숙’이라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배적 프레임을 깨는 데도 기여한다.

## II. 한국 청소년 인권운동의 역사<sup>9)</sup>

인권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본격화된 것은 불과 15년 전의 일이다. 청소년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를 싹틔우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권운동으로서 독자적 길을 개척했다. 청소년 인권운동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청

8) 197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인구회의’, 198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네스코 후원으로 열린 ‘세계청소년회의’, 같은 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세계 청소년의 해 국제회의’, 1991년 유엔청소년포럼, 1998년 국제노동기구가 주최한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회의, 1999년 유엔이 후원한 ‘밀레니엄 청소년회의’,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서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전쟁과 무기경쟁,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제3세계의 저발전, 인종차별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등의 문제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각국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지·우지연, 청소년 권익증진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우리의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새로운 천년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 1999 참조.

9)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좀더 자세한 분석은 온라인매체 <인권오름>(www.hr-oreum.net)에 실린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기획 연재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이 연재기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자료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정리한 자기 운동의 역사다.

소년들이 어떤 언어로 자기 삶과 교육을 해석했는지, 그리고 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실천들을 이어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 1. 청소년 인권운동의 맹아 : 민주화운동과 참교육운동

청소년 인권운동은 87년을 전후한 민주화운동과 참교육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80년대를 휩쓴 민주화운동이 열어젖힌 ‘인식과 실천의 해방구’는 청소년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전두환 신군부정권 하에서 취해진 ‘7.30 교육개혁조치’는 입시경쟁의 강화와 병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학내민주화를 향한 교사, 학생들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sup>10)</sup> 특히 85년 ‘민중교육지’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 탄압 이후 오히려 건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른 교육민주화 운동은 중고등학생운동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을 댕겼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동참해야 하며 교육에서도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87년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의 요구는 점차 학도호국단의 자리를 대신한 학생회의 직선제 실현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다. 학생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공감대를 넓혀나갔고, ‘반장에서 대통령까지 직선으로!’라는 요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홍사단 서울지부가 개최한 87년 11월 학생의 날 행사에는 1천5백여 명의 중고생이 참석하였고, 88년 2월 KSCM(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이 개최한 ‘자율적 학생회를 위한 공청회’에만 4, 5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잇따르자, 88년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살인교육’ 중단과 보충·자율학습 폐지를 내건 학생들의 농성이 시작됐다. 자살한 한 여중생이 유서에 남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같은 제목의 영화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자살 정국’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가운데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참교육’을 기치로 창립했는데, 전교조가 내건 참교육 정신은 ‘학생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살리는 교육을 만들자’는 것으로서 차라리 교사들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 탄압으로 같은 해 9월 해직된 교사 수가 1,700여명에 이르게 되자, 참교육의

10) 7.30 교육개혁조치는 본고사 폐지와 내신성적 반영, 과외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내신성적이 대입에 반영되자 성적 경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과외금지 조치 이후 과외가 음성화되자 정부는 학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강제 보충·야자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감금된 채 과중한 학습에 시달려야 했다.

기치에 동의했던 학생들이 해직 반대 싸움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항의의 뜻을 담은 리본달기, ‘밤샘공부’(하교 거부), 수업시간에 전체 학생이 뒤로 돌아앉기에서부터 점거 농성, 단식농성, 시위, 심지어 투신까지 학생들의 저항은 뜨거웠다. 광주 동아여중고생 4천여 명과 송원학원의 중고생 8천여 명은 운동장 농성으로 징계위원회를 무산시켰고, 인천 세일고 학생들은 해직교사의 수업에 대체 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수업을 거부한 채 한 달 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전교조 학생사업국에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1989년 한 해 전교조를 지지하며 투쟁에 나선 전국 학생들의 수가 250여개 학교, 47만 명을 넘어선다. 또한 광주, 부산, 마산·창원, 목포, 서울 등 각 지역에서는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가 결성돼 전교조 탄압에 항의했다.

당시 중고등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과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청소년들이 단지 ‘선생님 지키기’ 차원이 아니라 민주교육과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을 주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이후 정권 차원에서 학생회 권한의 축소(예·결산권 폐지)와 주동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동아리 폐쇄 등 탄압조치가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운동은 상당히 위축되기에 이르렀지만, 비공개 모임이나 네트워크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1992년에는 18세 선거권을 주장한 ‘민중대통령과 함께 하는 고등학생 선거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인권’에 대한 자각이 싹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2. 한편의 글, 사회를 흔들다 - 최우주 학생의 민원제기와 중고등학생복지회의 등장

1990년대 초반 학교와 정부 당국의 탄압으로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던 청소년 운동은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청소년인권운동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다. 그 이전까지 청소년운동이 중고등학생이 전개한 ‘민주화운동’, ‘사회변혁운동’이었다면, 이후부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갖고 인권의 언어로 운동하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운동이 1990년대부터 여성운동, 인권운동, 환경운

11) 89년 9월 30일에 설립된 <마산·창원지역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의 발족선언문은 “우리 학우들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를 입시 전쟁과 철저한 이기주의적 인간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 민주 시민의 예비단계로서 모든 학생회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우들의 자율적 능력을 무시하고 단지 의무와 순종적 인간만을 요구하는 관료주의적 교육자와 재단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라며 창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 등 다양한 운동으로 분화해갔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헌법의 고귀한 정신을 준엄하게 지키는 헌법 재판소에 학교장의 지나친, 전횡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기본권의 억압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일원인 저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5개월간의 고등학교 생활은 제가 죄수들처럼, 개 돼지처럼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규제되는 생활로 점철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상식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이 더 이상 학교 운영권자의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독단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방과 후의 시간을, 방학 동안의 시간을 당연히 학생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1995년 7월 22일 PC통신 하이텔 게시판에 올라온 이 한 편의 글은 청소년 인권운동의 독자적 등장을 예고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당시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우주 학생은 학교의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시행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려다 절차상의 문제로 청와대,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지만, PC통신 여론광장에서의 반향은 뜨거웠다. <최우주 군의 학교 문제, 함께 따라가 봅시다>라는 제목의 토론방이 개설되면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육구조에 대한 토론이 줄을 잇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도 사람이다!’, ‘학생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다!’라는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발언의 통로를 갖지 못했던 청소년들은 이렇게 PC통신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광장’을 만들어나갔고, 그 흐름은 같은 해 말 <중고등학생복지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중고등학생 회원으로만 이루어진 중고등학생복지회의 활동은 인권을 화두로 청소년의 삶과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탄생시켰다.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독립된 개념으로 사회화되기 시작한 것 또한 이들의 기여다. 학생복지회는 이후 온라인 소통방식이 갖는 한계를 절감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학생을 위한 학교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자, 1998년 11월 3일 ‘학생인권선언서’<sup>12)</sup>를 발표해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12) 중고등학생복지회의 선언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이, 성별, 학교 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과도기의 세대가 아닌, 인격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생각과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포함) △쾌적한 환경



### 3. ‘노컷운동’과 청소년인권운동의 본격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이른바 ‘학교붕괴’ 담론이 새롭게 부상했다. 청소년들의 탈학교, 학교부적응 증가, 수업 거부 등으로 드러난 학교붕괴 현상은 IMF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신빈곤의 등장, 그리고 가혹한 입시경쟁과 억압적 학교에 대한 수동적·적극적 저항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와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비판 목소리가 집결된 곳은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공간이었다. 채널 텐(Channel 10),<sup>13)</sup> 사이버유스(CyberYouth),<sup>14)</sup>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아이두(www.idoo.net)<sup>15)</sup> 등이 사이버 공간에 터를 잡은 청소년들의 새로운 아지트였다. 학교붕괴, 만18세선거권,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들의 삶과 결부된 의제들에 대한 토론이 이곳에서 꽃을 피웠다. 한편, 중고등학생복지회 역시 소규모 동아리 형태를 벗어나 대중적 중고등학생 조직을 건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2000년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그들은 곧 ‘노컷운동’이라 불리는 두발자유운동으로 결집했다.

2000년 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두발자유 서명 게시판’은 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16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학생연합은 거리 캠페인과 집회로 두발자유운동의 의의를 알렸다. 이 과정에서 소통과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두발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

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의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 △학생자치활동이 교사나 학부모 등 타인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권리 △자신이 원하는 매체를 접할 수 있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노동활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있으며 학생이란 신분으로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복지회는 △위와 같은 학생의 모든 권리를 부당한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학생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책임을 지니며 △사회는 권리 보장에 합당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정부는 법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3) 국내 최초의 청소년 전문 웹진.

14) ‘사이버유스’는 문화관광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커뮤니티로서 18세 선거연령 이하, 자퇴생들의 인권 문제, 두발제한 반대 등 청소년 인권 담론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온 핵심적인 공간이었으나 2002년 운영이 중단됐다.

15) 1999년 ‘10들에 의한 10대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를 표방하며 출발한 아이두는 전성기에는 3-4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 회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청소년인권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한 공론화 작업, 16만여 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던 2000년 두발제한 반대 운동, 2002년 18세 선거연령 인하 운동, 2003년 네이스 폐지 캠페인 등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도 했다.

인식이 싹텄다. 청소년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한 교육부는 그해 10월 ‘학교별 토론회를 열어 두발규정을 다시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는 정도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교육부의 지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결실이었지만, 학생들의 불평등한 지위를 고려할 때 학교별 토론회를 통한 규정 개정은 기만적인 해법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을 통해 학생연합과 같은 청소년 조직에 회원 수가 급증하고 지부가 건설되는 등 영향력을 확장한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학교의 징계 압력, 교육청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활동을 이어나갔고, 두발자유를 넘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등 교육 의제 전반<sup>16)</sup>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학생연합은 2000년부터 2001년 초까지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전개한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의 교칙 분석 작업(‘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학생인권을 일상적으로 억압해온 학교의 문제점을 크게 이슈화시키고 교칙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다.<sup>17)</sup> 조직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한 결과 학생연합은 2002년 들어서면서 점차 활동력을 잃었지만, 이들 청소년들이 던진 의제들은 흙씨가 되어 다른 청소년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

#### 4. 학교만이 문제인가? : 청소년인권 의제의 확산

2000년대 전반기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의제가 체벌, 두발자유, 학생자치권 등 기존 의제를 넘어 다양하게 확장되는 시기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래 네이스) 반대, 학교 내 종교의 자유, 18세 선거권 쟁취운동과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가 이 시기에 와서 본격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이 가운데 네이스 반대운동과 학내 종교자유 운동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전개한 운동으로서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당시 교육부가 추진했던 네이스는 학생·학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거 집중시키는 시스템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인권단체와 교사단체의 반대운동 못지 않게 청소년들 자신의 반대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청소년들은 네이스에서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동의 여부를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이 사회의 모순을 읽었다. ‘아이두’와 학생연합, ‘네이스를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등에서는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청소년의 힘으로’, ‘희망네트워크

16) 학생연합이 제기했던 인권문제로는 강제 보충·자율학습과 두발·복장 제한 철폐, 체벌 폐지, 고교 등급화·자립형 사립고 폐지, 교육선택권 보장, 교내 성차별·성희롱 추방,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보장, 교칙 개정 등이 있다.

17) 교칙 분석의 자세한 결과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2001을 참고하면 된다.

작은 숲' 등의 단체는 거리캠페인과 교육청 앞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에 나섰다.

2004년 6월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였던 서울의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이 종교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를 비판하며 강제 예배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교내방송을 내보냈다. 그리고 교육청 앞 1인시위에 나섰다.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학을 종용하던 학교는 강의석 학생을 결국 퇴학시키기에 이른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미션스쿨종교자유 다음카페', '청소년 모임 ROY(Right of Youth)', '강의석군 부당징계 저지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가 꾸려진다. 무려 45일에 걸친 강의석 학생의 단식이 있고 나서야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참석 자율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법원에서도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무효라는 결정이 있었다. 이렇듯 학내 종교자유 운동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대정부 요구안 전달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의 직접적인 불복종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2000년대 전반부에는 '학교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청소년인권 의제가 터져나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18세 선거권 쟁취 운동'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활발해졌다. 18세 선거권 확보를 위해 결성된 '낮추자'<sup>18)</sup>, 전국 15개 청소년 단체와 동아리, 학생회 등이 참여한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sup>19)</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듬해인 2003년 8월, 18살과 19세의 청소년들이 모여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권 인하 운동은 2004년 만 20세에서 만19세로 선거연령이 인하되는 데 기여했고, 청소년에게도 시민권, 정치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의제를 사회에 던졌다.

2003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청소년 성소수자 '고 욱우당'(당시 19살)의 죽음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 역시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다. 성정체성의 다름이 비정상적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청소년이 폭력과 자살의 위험에 놓여있는데도 제대로 된 정보조차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 집중 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인권 단체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만나려는 노력을 확대했고, 2008년에는 상담과 인권활동을 내건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http://cafe.daum.net/Rateen>)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 안에 청소년모임이 만들어지거나 청소년들만을 위한

18) '낮추자'에는 15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우리', 매년 2차례 토론회를 열어 청소년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원주시 고교연합 토론동아리 'Distopia', '우리스쿨', 청소년 웹연대 'With' 등이 결합했다.

19) 이 네트워크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등의 청소년단체들이 함께했다.

독자적인 행사 기획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문제도 2000년대 전반기 새롭게 등장한 의제다. 2000년 YMCA에서 시작한 청소년 노동상담, 2002년 참여연대의 ‘힘내라 알바’ 사업, 2003년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의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 보고, 2005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킹의 노동인권교육 사업과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등을 거치면서 청소년인권운동은 학교문제를 넘어 노동문제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 운동은 비록 지금까지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조금씩 청소년 당사자들의 증언과 참여가 확장되고 있고 2009년 청소년이 주체가 된 ‘알리바바’(알바 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모임도 결성됐다. 알리바바 모임은 청소년 대상 거리 홍보 캠페인,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연대활동,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 5.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결집과 학생인권법 제정운동

2005년 청소년들은 다시금 학교 안팎에서 인권 보장 목소리를 드높였다. 서울의 송파공고에서 개학날 150여 명의 학생이 교문 앞에서 집단으로 머리를 잘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학기 초 ‘기강 다잡기 마구잡이 단속’이 연일 이어지자, 시도교육청 게시판은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들의 락카 시위, 학내집회, 서명운동 등이 전개됐고 인터넷에서는 다시 두발제한폐지 서명운동이 개시됐다. 거리에서도 두발자유 거리 캠페인과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두발자유 학생운동본부’가 결성되고, 5월 14일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학생운동본부와 함께 ‘두발자유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청소년들의 집회 준비를 지원하고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막아내는 데 힘을 보탰다. 이어 19일에는 송파공고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26일 성남 풍생고에서는 1천여 명의 학생이 운동장에 모여 두발자유를 외쳤다. 교내에서 청소년들이 집회를 열어 집합적으로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새로운 광경이 시작되기에 이른다.

5·14 청소년 행동의 날보다 일주일 앞서 열린 ‘입시경쟁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촛불문화제’도 청소년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사회적 장면이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준비한 이 추모제는 내신등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교육당국의 행사 취소 압력에서부터 교사, 장학사 현장 배치 등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고 나와 ‘내신등

급제 반대'를 외치면서, 이날의 추모식은 청소년들의 조직적, 집단적 힘을 온 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으로 기록됐다.

2005년의 경험은 2000년 인터넷에만 머물렀던 서명과 청원 형식의 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하반기 청소년들의 인권활동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이에 따라 이슈 중심의 일시적 운동, 한해살이 도돌이표 운동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모색이 시작됐다. 2006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청소년운동의 고질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결성한 것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였다. 모였다 흠어지기를 반복하지 말고 인권의 가치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구심을 만들자, 학교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자,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활동가들을 남기자 등이 네트워크의 결성 목표였다. 네트워크의 결성을 계기로 의제별로 분산돼 있고 부침을 거듭하던 청소년 인권 활동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개념과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집회 개최, 청소년들의 학내시위를 지원하는 '스쿨어택',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진행한 두발자유·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청소년 여름 인권캠프 등의 활동을 벌이며 지속적 활동을 펼쳐 나갔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에 진입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청소년인권의 요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매개 구실을 담당했다.

학교를 상대로 한 청소년들의 싸움도 줄을 이었다. 4월 서울의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벌였고, 5월에는 서울 동성고 오병헌 학생이 강제 0교시와 강제 보충·야간학습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앞 1인시위에 나섰다. 8월말에는 수원 청명고에서 일방적으로 개악된 두발규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학내 촛불시위가 있었다. 11월 학생의 날을 맞아서는 서울경기학생회연합 주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회 100인 선언이 발표되었고, 12월 8일 파주 금릉중학교 학생들이 체벌, 강제이발, 소지품검사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와 교육청을 긴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운동 소식을 널리 알림으로써 청소년인권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한편, 청소년들을 징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원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라는 명제도 유연해지기 시작했다.<sup>20)</sup>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20) 중고등학생복지회, 학생연합과 같은 청소년들의 모임이 빠른 시일 안에 쇠퇴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청소년들에게만 회원 자격을 엄격히 부여했던 조직 운영 모델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비

서 학생연합의 후신으로 새롭게 출발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청소년 대중조직이 점차 회원 수를 확대하는 결실도 맺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도전과 성장은 교사들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구실도 함께 했다. 2006년 7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청소년단체가 함께 모여 발족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학생인권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국회 앞 1인 시위, 학생인권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버튼 달기 운동, 학생인권 지지 선언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9월 경북지역 학생인권백서 발간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북교사 인권지킴이 선언’을 발표했고,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11월 2일 학생의 날을 앞두고 ‘전북교사 학생인권지킴이 선언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7년말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는데, 비록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학생 인권 보장’<sup>21)</sup>이 법제화되는 결실을 맺었다.<sup>22)</sup>

## 6. ‘촛불청소년’의 등장과 ‘나쁜 교육’에 대한 저항

2008년 5월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달이다. ‘87년 민주항쟁의 재현’으로까지 평가된 그해 촛불집회에서 도화선 구실을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 청소년들이었고, 이들은 촛불집회 초기 참여자의 60%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들이 들어 올린 건강권과 ‘국민주권’의 기치는 많은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고 거대한 촛불의 물결로 이루어졌다. 촛불집회 개최 이전인 4월 6일 안단테라는 청소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최초로 내걸고 온라인 서명을 조직, 무려 139만여 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넷에 개설된 청소년 촛불카페는 모두 32개 정도였는데, 대학생 카페보다 중고생 카페가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청소년학생연합(전청련), 미친소몰아내는10대연합 등은 온오프라인에서 청소년들의 결집을 주

---

청소년들에 의해 대리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존재 현실에 대한 거부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시키기 힘든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들의 운동이 아니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이 중심이 된 운동’이라는 새로운 합의점이 비로소 자리잡기 시작했다.

2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2) 이 조항의 신설을 계기로 이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학생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지역별 사회협약을 준비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약화와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당국의 비협조로 협의체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도해 나간 대표적 조직이었다.

2008년 촛불 청소년의 전조는 2002년 촛불청소년에게서 발견된다. 당시 신효선·심미선 두 여학생의 죽음을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 덕분이었고, 의정부여고 학생들은 미군부대를 직접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1년이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체 대책위를 만들고 ‘청소년 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온라인 서명과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소과개정과 미국의 사과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자발성과 저력을 보여줬다. 당시 청소년들은 촛불집회 참여를 막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맞섰다.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자리, 누구에게도 지도되지 않았던 촛불집회의 주역은 다름 아닌 두 청소년의 죽음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던 청소년들이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다시 2008년 광장에 등장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는 구호로 대표되는 보호의 흐름 속에서도, 10시면 청소년 귀가를 외치는 목소리의 틈새에서도 촛불 청소년들은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될 때까지 모이자!’, ‘우리가 두렵지 않느냐!’는 당찬 외침에서부터 재기발랄한 발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여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까지도 기대할 만한 수준의 활발한 참여 동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은 자연스레 ‘나쁜 교육’과 촛불집회 현장에서 드러난 청소년관<sup>23)</sup>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됐다. 당시 촛불집회 현장에서 거리에 남겨졌던 청소년들의 낙서를 보면 정부의 ‘4·13 학교자율화 조치’<sup>24)</sup>로 대표되는 교육정책의 반민주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일방적 보호를 거부하고 스스로 시민임을, 정치적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정권의 폭력적 진압으로 흩어지고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 강화로 발이 묶이게 된 이후에도 청소년인권운동은 교육감 선거권 획득 운동,

23) 당시 촛불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촛불집회 웹 홍보물, 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는 자진 귀가시키겠다는 방침, 중고등학생들의 등교거부는 우려하면서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은 지지하는 참여자들의 이중성, 등교거부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행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삭제하는 촛불카페 운영진의 태도, 예비군시위대의 여성과 청소년은 뒤로 물러나라는 태도의 폭력성 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4) ‘4. 13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부 지침들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위임되는 한편, 학교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까지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인권 수준을 추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위임된 지침들로는 △수준별 이동수업, 0교시·심야·보충과 관련한 학사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혼지 지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2008년 7월 서울과 2010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등장한 <기호 0번 청소년후보> 운동은 교육감 직선제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를 보여준다. 좋은 교육감을 단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 나쁜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교육감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 운동은 청소년 인권의식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 구실을 한다.

일제고사 반대운동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는 활발했다. ‘일제고사반대청소년모임 Say-No’는 촛불집회에서의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임시 연대체로서 2008년 말과 2009년 거리 캠페인, 학교 앞 서명전, 체험학습과 등교거부 운동, 교육청 앞 농성 등의 활동을 벌여나갔다.

## 7. 학생인권조례, 청소년인권을 사회의 중심 의제로!

일제고사 반대운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갈 무렵, 청소년인권운동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교육청 발 학생인권조례 추진 소식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축적돼 왔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요구가 집약적으로 담길 수 있는 입법운동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규제, 체벌, 소수자 차별, 강제 야자와 보충, 종교 강요, 학생자치활동 탄압, 소지품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 인권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지도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교육감의 학교 지도권한의 범주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권리구제기구를 새롭게 설치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의 일방 독주를 제어하는 것은 물론, 침해된 인권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개정시 학생의 참여 보장, 교육청 차원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생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차와 정책을 법제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비화되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0년 청소년인권운동은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9월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부터는 교육과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발판으로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났다.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는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되었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성사된 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10년과 2011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보여준 새로움은 청소년인권이 청소년과 일부 인권단체만의 외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진보를 바라는 단체들의 공통 관심사이자 사회의 중심 의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차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제안을 듣는 창구가 마련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III. 청소년인권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앞에서는 청소년 인권 의제가 확산된 주요 계기나 사회적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개괄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인권운동이 마치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튼실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재는 여전히 초라하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인권모임은 교육정책의 변화나 학교나 가정의 태도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활동 경험과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한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와 20대로의 진입 등에 따라 퇴장하는 일들도 빈번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사회나 단체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나 가정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롭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럼에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15년을 뒤돌아볼 때,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기성사회의 태도가 상당히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 청소년인권운동이 던진 문제의식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고, 몇몇 요구들은 법이나 정책으로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인권의식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립학교의 비리나 폭력문제 해결 운동,<sup>25)</sup>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설립 반대운동 등과 같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도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sup>26)</sup>하는 태도를 보이

25) 2004년 인천외고, 2008년 광명의 진성고 학생들의 학교 비리와 학생인권 탄압에 맞선 활동이 대표적이다.

26)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초기였던 2003년, 대전 한밭고 1학년이었던 박호언 씨는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시 학생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해 청소년기본법의

고 있다. 지역에 자리 잡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인권센터,<sup>27)</sup> 청소년교육복지단체 등에 등지를 튼 청소년 동아리나 자치위원회 활동에서도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활동은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권리를 주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성취하는 경험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5년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유엔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는데,<sup>28)</sup> 이 지침은 한국사회 청소년인권운동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는 데도 도움을 준다.

## 1. 관련 법령과 교칙의 개정

현재 각급 학교의 교칙은 청소년들의 인권활동과 사회 참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칙에는 청소년들의 교외 활동이나 모임 결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징계 위협을 감내하면서 활동을 벌여야 할 조건이다. 실제 학교측의 징계 위협으로 모임이나 개별적인 인권활동을 중단하는 청소년들도 다수 있어왔다. 징계까지는 아니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토록 하는 규정 역시 청소년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또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외부에 알린 경우에도 실제 해결 단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국가인권위에 들어온 학생들의 진정도 학기 초엔 급증하지만,

---

개정을 이끌어냈다. 2007년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근거도 없이 휴대폰을 수거,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 2008년 조기 등교 강요는 학생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결정, 2008년 학생에게도 학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 2008년 수업 도중 학생을 불러내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결정 등 학생인권 기준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에도 청소년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가 한몫을 했다.

27) 대부분의 청소년 인권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YMCA나 청소년상담소 등이 위탁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부문에 자생적으로 설립된 인권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28)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유엔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은 ① 청소년들이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청소년들이 권리와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개발·강화하고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증진하며,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 ③ 청소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적·교육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 ④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평가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극 고려할 것, ⑤ 청소년들 사이의 국가적·지역적·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장려할 것, ⑥ 유엔총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조사단계에 들어가면 진정을 취하하는 일들이 잦다. 신분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탓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급 학교의 교칙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인권이나 참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의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구체적 인권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각급 학교의 교칙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인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도 잇따라야 할 것이다. 참정권 보장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치이자, 청소년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 더욱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청소년 참여기구들의 법제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률로서 설치돼 있는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시설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자치위원회,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각급 학교의 학생회 등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기하는 한편, 이들 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설치된 기구들은 권한이 불분명하고 청소년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회의 경우에도 권한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재정 지원을 미끼로 청소년모임의 활동 내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보완, 청소년기관 운영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민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성취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 참여기구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sup>29)</sup>

또한 대개 참여 위원들의 구성 방식에서 소속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성적 등 자격요건이 강조됨으로써 청소년의 열린 참여를 가로막는 요

29)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경우 의결사항을 국회에 청원하거나 관련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활동을 벌인다. 청소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입시교육에 대한 압박 때문이기도 하고 ‘청원’ 형식이 갖는 힘의 한계 때문에 실제 입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원이라는 형식을 택하더라도 그 청원이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청원서 제출로 활동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 내용을 널리 알리고 지지를 끌어모으는 과정이 뒤를 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적극 기획되지도 않는다. 이는 학교 단위의 학생회가 ‘어용기구’로 엄청난 힘을 갖거나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양극단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으로 작용한다. 위원 선임 절차에서 개인별 신청과 추천을 통한 선별 등의 방식이 열려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다.

### 3. 인권교육 강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시민임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 교과과정 개편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학교교육 내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장들을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학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교육 교재와 자료들을 발간하고, 인권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고 직접 교육에 나서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재 개발과 교육자 양성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권교육은 ‘교실’ 내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어내는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정치의식이 성장했다는 보고들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모임 결성과 네트워킹 방법, 의견 수렴 방법, 캠페인을 비롯한 직접행동과 로비 방법, 법률소송 방법, 실태조사 방법, 미디어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자율적 프로젝트 지원

많은 청소년 모임이나 교내외 동아리, 인터넷매체 등이 사·공간의 제약과 재정 문제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다음세대재단, 아름다운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청소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 범위에 한계가 많다. 청소년들이 특정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목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려고 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프로젝트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글로벌 키

즈(Global Kids)', '국제아동평화회(Peace Child International)'과 같은 기구들이 기금 마련과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청소년 관련 시설을 개방하거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무료 공간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다.

## 5. 입시정책과 교육과정의 변화

아무리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차원의 참여마당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 스스로가 인권활동과 사회참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현재의 경쟁적 입시정책은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회를 경험하고 시민으로서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하고 있고, 참여 동기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쫓불 청소년'들을 다시 불모로 잡은 것도 일제고사 부활을 비롯한 입시경쟁교육의 강화였다. 그렇게 돌아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인권문화를 이루는 데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통로는 딱 막혀 있다. 몇몇 개별교사들의 개인적 열정과 분주함이 없다면 인권을 학습할 기회란 거의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청소년들이 다수 모이는 교육과 참여의 공간은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곳들뿐이다. 참여가 '대가'가 되는 한 그 활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인권 활동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시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인권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익힌 인권의식은 경쟁적 입시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IV. 나오며

현재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은 활발한 참여를 통해 '미성숙의 신화'에 갇힌 자신들을 스스로 해방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문제는 물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점점 더 청소년들의 권력은 강화되어 갈 것이다. 변화된 의식과 행동을 통해 인권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힘은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을 대변해 주거나 그들을 지지해주는 것보다 청소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애물을 없애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공현 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넘보다ㅋㅋ, 양철북, 2009.
- 곽한영,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효능감, 참여 의무감, 관심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김영지 외,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_\_\_\_\_,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김은경, 민주시민을 키우는 어린이 정치, 리젼, 2008.
- 김형주 외, 청소년 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조사연구 -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3.
- 동성애자인권연대,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야기, 미출간 도서, 2010.
-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 \_\_\_\_\_,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의미하는 것, 교육공동체 벗, 오늘의 교육 창간준비호, 2011.1.
- 배경내 외 공저, 1%의 대한민국, 철수와영희, 2008.
- \_\_\_\_\_,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 한울, 2009.
- \_\_\_\_\_, 인권 교문을 넘다, 한겨레출판, 2011.
- 배규환·이창호,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 간 소통방식에 관한 연구 : 2008년 촛불 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조례안 개발연구, 경기도교육청, 2009.
- \_\_\_\_\_,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 송창석, 청소년 정치교육과 정치참여, 오늘의 청소년 175호, 2002.12.
- 양돌규,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5 : 아동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6.
- 유운중 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기사 시리즈, <인권오름> 2006.5.3~2007.5.15.

- 이매뉴얼 월러스틴, 자유주의 이후, 강문구 역, 당대, 1996.
- 이용교, 청소년 인권과 인권교육, 인간과 복지, 2004.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날다 : 인권교육길잡이2, 사람생각, 2008.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2001.
- 임희숙, 참여 민주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철학과 박사논문, 2001.
- 전명기, 청소년의 참여 그리고 권리, 오늘의 청소년 173호, 2002.10.
- 전병진, 고등학교 학생선거활동 참여정도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존 로크,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문지영 역, 까치, 1996.
- 중경고등학교역사탐구반, 10대들의 역사리포트, 역사넷, 2003.
- 천정웅·김영지·임지연,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_\_\_\_\_, 청소년참여 증대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천희완 외, 아름다운 교육실천 사회참여체험교육, 우리교육, 2001.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2007.
- 최원기 외,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캐서린 아이작, 우리는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로 간다, 조희연 역, 아르케, 2002.
- 피스 차일드 인터내셔널, 깨어나 일어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역, 사람생각, 2000.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자료집, 2010.10.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천년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II,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왜, 청소년참여인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 청소년정책연구 세미나 자료집, 2003).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 청소년운동 그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2.
- 황진구·권태희,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Aries, Philippe.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translated by Robert Baldick, Vintage Books, New York, 1962.

Freeman, Michael D. A. "Introduction: Rights, Ideology and Children", in  
Freeman, Michael D. A. et al.(eds.)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Holt, John. Escape from Childhood, E.P.Dutton, 1974.

Wringe, C. A. Children's rights: A Philosophical Stud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Boston and Henley, 1981.

<국문초록>

##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와 도약을 위한 과제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이 논문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인권운동의 역사를 분석한다. 역사적으로 청소년 인권의 초점은 보호에서 참여와 자기결정으로 이동해 왔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주체적 운동이 일구어낸 변화였다. 초기 교육 민주화에 집중했던 청소년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생인권운동으로 발전하여 2000년대 이후 정치적 권리, 소수자인권, 노동인권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운동으로 확장됐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청소년인권은 사회의 중심 의제로까지 격상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이 논문은 청소년의 인권운동과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주제어 : 청소년 인권, 학생인권, 청소년 참여, 청소년 인권운동 역사

<Abstract>

## The history of Youth's Rights Movement in Korea and the Task for Its Leap

Bae, Kyung-Nae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youth's social participation and rights movement which has been facilitated since the late 1980's. Historically, the focus of youth's rights has moved from 'Protection' to 'Parti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change made by youth's social participation. In its early stages, youth's rights movement focused on the democratization of the education. Since the middle of 1990's, the focus changed into the students' rights. Since the 2000's, youth's rights movement found out the new issues such as political rights, minority rights, labor rights, etc. Especially, the youth played an active part in the '2008 Candlelight Assembly'. Recently, youth' rights became the main issue of the society due to the movement enacting the ordinance for students' rights. In the end, this study suggests the tasks for facilitating the youth's social participation and rights movement.

Key words : Youth's rights, Student's rights, participation of the youth, the history of Youth rights' movement in korea